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중 “조치의뢰”를 “자율처리필요”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나목 중 “조치의뢰사항”을 “자율처리필요사항”으로, “의뢰하는”을 “하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 중 “조치의뢰·주의·변상·개선사항”을 “자율처리필요·주의·변상·개선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치요구사항”을 “조치요구사항(제14조제2항제2호나목의 ‘자율처리필요사항’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조치의뢰사항”을 “자율처리필요사항”으로, “조치의뢰하기”를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치의뢰”를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로 한다.

제2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사후 수습 노력”을 “사후 수습 노력, 자진신고”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기관 및 임원제재의 가중)”을 “(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가중)”으로 하고, 제24조제1항 중 “기관경고를 3회이상 받게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제재로”를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를 1단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기관 중 제재를 더 많이 받았던 기관의 제재 기록을 기준으로 가중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의적경고조치”를 “주의적경고 이상의 조치”로, “문책경고로”를 “제재를 1단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문책경고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주의적경고·주의를 받고도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제24조제6항 중 “제2항 내지 제4항”을 “이 조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직원이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⑧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가중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제1항 중 “직원에 대하여 제재하는 경우에 위법·부당행위가

반복되거나,”를 “직원이”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공적 기타 정상”을 “공적, 자진신고, 기타 정상”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수사당국에 그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이하 “고발 등”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를 “감독원장이 미리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사당국에 그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32조 중 “제21조제1항제1호”를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감독원장 자문기구로서 제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감독원장이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때에는 위규 행위사실, 관련 법규, 제재 예정내용 등을 제재대상자(제19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구체적으로 사전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④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에 관한 세부내용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 및 열람권 보장) ① 감독원장은 심의회 운영 등 제재절차에 있어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35조에 의한 사전통지를 받은 제재대상자(제8조의3의 “조력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의회 위원들에게 제출된 심의회 부의예정안 및 심의회에 제출될 서류(이하 “서류 등”이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수사의 밀행성 필요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관련 사안의 조사에 심각한 장애가 예상되는 등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재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재대상자의 서류 등 열람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제2항 중 “조치의뢰”를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로, “조치의뢰가”를 “자율처리필요사항이”로 한다.

제42조제1호 중 “폐소확정”을 “폐소확정(폐소금액이 은행의 경우 3억원

이상, 기타 업권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인 경우만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동법 시행령 제26조(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을 “동법 시행령 제26조(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 중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제1호 및 제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중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제1호 및 2호에서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제1호 및 제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가목 중 “종합금융회사”를 “종합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한다.

별표 2 제5호가목에 (3) 중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동법 시행

령 제26조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정의)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지적사항”이라 함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내용 또는 업무처리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말하며, 이는 문책· <u>조치의뢰</u> ·주의·변상·개선사항으로 구분한다.	10.----- ----- ----- ----- ----- <u>자율처리필요</u> ----- -----.
11. ~ 20. (생 략)	11. ~ 20. (현행과 같음)
제14조(검사결과와 통보 및 조치)	제14조(검사결과와 통보 및 조치)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 작성 및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적사항	2.-----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u>조치의뢰사항</u>	나. <u>자율처리필요사항</u>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	----- ----- -----

을 통보하여 당해 금융기관
의 장이 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자율적으로 결
정하여 조치하도록 의뢰하는
경우

다. ~ 마. (생략)

3. (생략)

③·④ (생략)

제15조(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리
기한 및 보고) ① 금융기관은 제
14조제1항의 조치요구사항에 대
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검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
한 기한내에 이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기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생략)

2. 지적사항 :

가. (생략)

나. 조치의뢰·주의·변상·
개선사항 : 3월 이내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금융기관의 정

----- 하는 경
우

다. ~ 마.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
리기한 및 보고) ① -----

-----.

1. (현행과 같음)

2.-----

가. (현행과 같음)

나. 자율처리필요·주의·변상
·개선사항 : -----

② -----조치
요구사항(제14조제2항제2호나

리부진 및 정리 부적정 사유가
관련 임직원의 직무태만 또는
사후관리의 불철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책임
이 있는 임직원에게 대하여 제4장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절
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
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게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
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
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생략)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
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
한 조치의뢰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조치
의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
(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
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임원 등

목의 ‘자율처리필요사항’을 제
외한다)-----

-----.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자율처리필요사항-----
-----자율
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

② -----

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조치의뢰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2조(제재효과)

①·② (생략)

③ 임직원이 2회 이상의 주의조
치를 받고도 3년 이내에 다시 주
의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제23조(기관 및 임원제재의 감면)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제재를 함
에 있어 위법·부당행위의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
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기관 및 임원제재의 가중)

① 금융기관이 위법·부당한 행
위를 함으로써 최근 3년 이내에
기관경고를 3회이상 받게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2호 또
는 제3호의 제재로 가중할 수 있
다. <단서 신설>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제재효과)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23조(기관 및 임원제재의 감면)

-----사
후 수습 노력, 자진신고, -----

-----.

제24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가

중) ① -----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
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법·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를
1단계 -----. 다만, 금융기
관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② 금융기관이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최근 3년 이내에 기관주의를 3회 이상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관경고로 가중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주
의적경고조치를 받고도 다시 주
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
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여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문
책경고로 가중할 수 있다.

⑤ 임원이 문책경고 또는 2회 이상의 주의적경고 조치를 받고도 3년내에 다시 주의적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⑥ 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
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에 대한 제재의 가중 및 감면
에 있어서는 제23조와 제2항 내
지 제4항을 준용하고 이 경우 해

대상기관 중 제재를 더 많이 받았던 기관의 제재 기록을 기준으로 가중할 수 있다.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
주의적경고 이상의 조치 -----

제재를 1단계 -----.

⑤ 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문
책경고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주의적경고·주의를 받고도 다
시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
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⑥ -----

-----이 조 제3
항 내지 제5항 -----

임권고·업무집행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는 각각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제25조(직원제재의 가중 및 감면)

① 직원에 대하여 제재하는 경우에 위법·부당행위가 반복되거나, 다수의 위법·부당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② 직원에 대하여 제재하는 경우에는 공적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9조(금융기관·임직원 제재시의 병과 등) ①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가 금융업관련법상 벌칙 또는 과징금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1

-----.

⑦ 직원이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⑧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가중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직원제재의 가중 및 감면)

① 직원이-----

-----.

② -----
-----공적, 자진신고, 기타 정상-----
-----.

제29조(금융기관·임직원 제재시의 병과 등) ①-----

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와 동시에 수사당국에 그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이하 “고발 등”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권고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면직의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32조(변상시의 병과)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변상요구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신분상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조(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감독원장은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 감독원장이 미리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사당국에 그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할 수 있으며-----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변상시의 병과) 제21조제1항-----

-----.

제34조(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감독원장
자문기구로서 제재심의위원회---

를 설치·운영한다.

②·③·④·⑤ (생략)

제35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등)

①감독원장이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때에는 제재의 내용 등을 제재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신설>

<신설>

-----.

②·③·④·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등)

①감독원장이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때에는 위규 행위사실, 관련 법규, 제재 예정내용 등을 제재대상자(제19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구체적으로 사전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에 관한 세부내용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의3(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 및 열람권 보장) ① 감독원장은

심의회 운영 등 제재절차에 있어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35조에 의한 사전통지를 받은 제재대상자(제8조의3의 “조력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의회 위원들에게 제출된 심의회 부의예정안 및 심의회에 제출될 서류(이하 “서류 등”이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수사의 밀행성 필요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관련 사안의 조사에 심각한 장애가 예상되는 등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재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재대상자의 서류 등 열람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p>제37조(이의신청) ①(생략)</p> <p>② 제19조제2항의 <u>조치의뢰</u>와 관련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조치가 예정된 직원은 당해 <u>조치의뢰</u>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을 통하여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③·④·⑤ (생략)</p> <p>제42조(주요 정보사항 보고)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민사소송에서 <u>패소확정</u> 되거나, 소송물 가액이 최직근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에 피소된 경우</p> <p>2. (생략)</p>	<p>제37조(이의신청) ①(현행과 같음)</p> <p>② -----<u>자율처리필요사항</u> 통보-----</p> <p>-----<u>자율처리필요사항이</u>-----.</p> <p>③·④·⑤ (현행과 같음)</p> <p>제42조(주요 정보사항 보고)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u>패소확정(패소금액이 은행의 경우 3억원 이상, 기타 업권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인 경우만을 말한다)</u>-----</p> <p>2. (현행과 같음)</p>
--	--